

인권 침해의 현장, 메이지 산업유산의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라

지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회 총회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 산업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되었다. 논의 끝에 이루어진 투표 결과(일본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 이 사안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메이지 산업유산에서 강제노동을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신의 함양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강제노동 은폐 시도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유산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이지 산업유산 시설 가운데 미쓰비시 다카시마·하시마(군함도) 탄광,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미쓰이 미이케 탄광 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인권 침해의 현장들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의 진실을 감추며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메이지 산업유산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호주, 네덜란드,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이 문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유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이 아니라 정의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유네스코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메이지 산업유산이 인권 침해의 현장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유산으로 거듭나도록 세계시민들과 연대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9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식민지역사박물관